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尹' 체포영장 언제 집행할지 촉각

법원, 수색 영장도 함께 발부... 강제수사 불가피 입장 수용 윤 변호인 강력 반발 속 영장 집행 과정 경호처 충돌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불법무효"라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주장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이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제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측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11조는 공무원이 소자·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원이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책임자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윤 변호사는 이 같은 예외 적시에 대해 "불법 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새해는 혼란도 아픔도 없는 한 해 되길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전국 해맞이 행사가 취소되면서 광주시 서구 금당산에도 예년보다 적은 인파가 몰렸다. 시민들은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탄핵당한 대통령, 국민 뜻을 외면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하면서 시간을 끄는 행태를 보이는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분노,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슬픔의 한 해를 보내며 올해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희망찬 일만 있기를 소망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인 임명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을 다룬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조한창(59·18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또 쌍 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마은혁(61·29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각각 '재판관 임명 행위'와 '일부 재판관 임명'한 것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지난 31일 재판관 2인을 임명함에 따라 현재는 재판관 '8인 체제'로 변경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씩 각각 임명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관이 총원되면서 6인 체제 하의 법적 다툼이 해소됐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도 커졌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한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관련해 "국익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무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제각각 반발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점과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무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중 2명만 선별해 임명한 것에 불만을 표출했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하는 등 후폭풍이 지속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반국가세력·부정선거 수사본부 편성"... 계엄지휘부 치밀 모의

여인형 구속기소로 본 내란음모 "합동체포조 운용·국군교도소 구금" 수방사 대테러부대 투입 준비도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군 지휘부가 반국가세력 수사본부와 부정선거·여론조사 수사본부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 조직을 계획하는 등 치밀한 사전모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31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내란 중요인물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러한 계획이 담긴 여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전 11시25분께 작성한 메모에 "합수본은 방첩 수사단장의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1처장의 부정선거·여론조사 수사본부로 편성"이라며 "참모장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각 100명씩 수사관을 파견받을 것"이라고 적었다.

국군 방첩사를 중심으로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수본을 꾸려 '반국가세력'으로 분류된 야당 정치인 등과 선거관리위원회 수사에 나설 계획을 세운 정황이 담긴 것이다.

여 사령관은 이 메모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에 의거 임무를 개시함"이라며 "국정원,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등 모든 정보수사기관은 합수본부장 명에 따라 투입"이라고도 적었다.

검찰은 계엄이 선포되기 이를 전인 12월 1일 15시44분께 여 사령관이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구성'과 관련해 작성한 메모도 확보했다.

여기에는 여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체포조 편성과 구금시설 준비를 지시한 정황이 담겼다. 여 사령관은 해당 메모에서 "경찰·조사본부, 30명 위치 파악, 합동체포조 운용"이라며 "수방사, 조사본부, 문서고 구금시설, 국군교도소 구금 운영 준비", "특전사 경호대, 경호팀 운용"이라고 적었다.

검찰은 이러한 메모 등을 토대로 여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방첩사 주도로 체포조가 운영·편성됐고, 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가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각각 100명의 인력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날 여 사령관과 함께 이진우 수도광위사령관도 구속기소하면서 그가 사태 하루 전인 2일 비상계엄 대비 계획을 정리한 휴대폰 메모도 공개했다.

이 사령관은 메모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사실이 전파되면 전 장병에게 TV 시청과 지휘관 정위치를 지시하고, 전 부대 장병에게 개인 휴대폰 통합 보관 조치와 영내 사이버 방 인터넷망 폐쇄를 지시한다고 적었다.

이 사령관의 메모에는 서울 수호의 중추적 임무를 수행하는 대테러부대 '수호신티에프(TF)' 투입을 준비시킨 정황도 담겼다.

이 사령관은 메모에서 장관 회의 직후 수호신 TF 출동을 지시하고 대테러 대기부대를 '선 투입' (먼저 투입) 해 국회 본관에 배치하는 한편 '후속 1개 대대(+)'를 투입한다고 적어 1개 대대보다 많은 병력 투입을 검토했음을 나타냈다. 또 '(필요시) 서울시장·경찰청장장과 공조통화 실시'라고도 적어 서울시와 경찰청에 협력을 구할 계획임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의료광고심의필 제120918-중-중32093호]

행복 퍼즐의 첫째는 건강!
조선대학교병원이 찾아드립니다.

조선대학교병원 교직원 모두가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절센터, 뇌신경지매센터, 뇌졸중센터, 당뇨병센터, 로봇수술센터, 소화기내시경센터, 심장혈관센터, 암센터, 정기이식센터, 척추센터

조선대학교병원 CHOSUN UNIVERSITY HOSPITAL
고객센터 1811-7474
· 권역응급의료센터 062-220-3119 · 공단검진 062-220-3615
· 종합건강증진센터 062-220-3030 · 홈페이지 https://hossp.chosun.ac.kr

2023.01.01 - 2025.12.31
관절전문병원 SPECIALTY HOSPITAL OF KOREA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
동이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38
☎ 062.650.2500